industrial accident

시행 4년 차,
중처법에 대해 궁금한 것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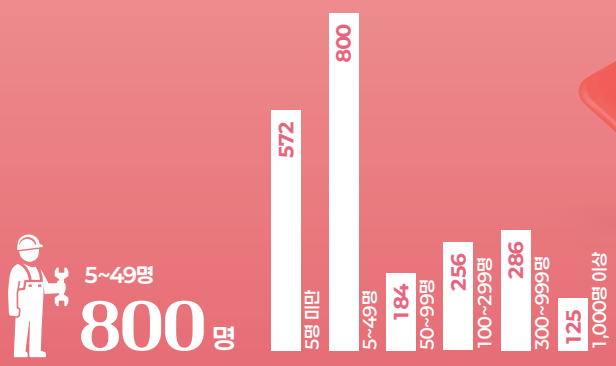
현장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Q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응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어떤 사고가 나면 중대재해로 처벌을 받는지,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업장 규모별 전체 산재사망 노동자 발생 현황

(단위: 명)



출처 고용노동부

A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장 내 모든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2021년 1월 26일에 제정되었고,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시행되었으며,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중대환경재해로 구분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중대시민재해는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제품 등의 결함으로 인해 사망자 또는 중대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중대환경재해는 특정 규모 이상의 환경오염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전체 사망 노동자 2,223명 중 1,327명(약 59.7%)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중대산업재해 발생률을 살펴보면, 시행 첫해인 2022년에는 전년 대비 39명(5.7%)이 감소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상시 노동자 수가 5명 이상인 개인사업주도 포함됩니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적용되며,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됩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을 위한 의무를 다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에 고의 및 인과관계가 명확할 경우에만 처벌을 받습니다.

예방을 위해 상시 노동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기업은 '전담 조직' 설치나 '안전관리자' 채용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제조업, 임업, 하수·환경·폐기물 처리업 등 5개 업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명의 안전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합니다. 50인 미만 기업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선임 의무는 없지만, 안전을 관리할 인력을 자체 지정하고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의 예방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50인 미만 기업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의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진단하고 개선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사업장에서 해야 할 일

출처 고용노동부

01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를 수립하고 회사 내 모든 종사자가 알 수 있도록 공표·게시

02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정하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적정 예산 편성

03 사업장 순회 점검, 안전보건 제안 제도, 이차사고 신고 등 근로자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

04 비상대응체계 수립·훈련, 재발방지대책 마련

05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절차 마련 및 정기적인 점검·조치